

“양국 新시장 개척 필요… AI·뷰티·문화 등 돌파구 될 것”

韓-中 비즈니스 포럼

李 대통령 “韓中, 때려야 뗄 수 없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호적 관계 경제적 측면서도 만들어 가길 바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을 만나 “한중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의 국빈관인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중은 같은 파도를 넘고 한편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성공적 관계를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이 더 이상 과거처럼 정해진 흐름 그대로 쉽게 따라갈 상황은 아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니다.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공급망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교역액은 3000억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과 생활용

품, 뷰티(미용), 식품 등 소비재, 영화·음악·게임·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간 사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점을 찾자면 끝없이 무너지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끝없이 가까워질 것”이라며 “한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

계니,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에 도움이 되는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새롭게 찾아나갈 항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내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중국 측 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참석한 허리펑 경제 담당 부총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양국의 정상회담이 반드시 공동 인식을 통해 양국 관계가 신뢰하는 발전 관계로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포럼에는 양국 대표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에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

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은 L S홀딩스 등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특히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호 회장, SM엔터테인먼트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 등 K-콘텐츠 관련 주요 기업 대표들도 동행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중국에서는 대외무역·투자촉진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비롯해 석유화공그룹, 에너지건설그룹, 금융그룹, TCL과 기그룹, 배터리 CATL, 문화 콘텐츠 텐센트, 통신 장비 ZTE 등 주요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경제사절단은 중국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경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두고 내부 갈등

반도체 산단에 원활한 전력공급 필요 與 전북 지역구 의원, 이전론 주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용인시 의원 반발

경기도 용인시와 인근에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전북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은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동남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의 일부다.

SK하이닉스는 약 122조원을 투자해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1기 팹(반도



체 제조시설)의 착공을 시작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용인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올해 부

지를 착공하고 2028년에 1기 팹을 착공하고 2030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단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함에 따라 초기 전력수요(3GW)는 산단 내 발전으로 충당하고, 후기수요(7GW 이상)는 원거리 발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문제도 하수 재이용수·팔당댐 잔여 용수·화전댐 발전 용수를 이용한다.

이번 논란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두고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이 쉽지 않다. 전기가 많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해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이 힘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정부 계획에서도 전력 후기 수요는 먼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온다는 계획이어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고 용인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우려한 바 있다.

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3선·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 장관이 확인했다”며 반도체 산단 전북 새만금 이전론에 군불을 뿜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 계획상으로는 전력 수요가 16기가 기가와트(GW)라고 하는데 원전 16기 이상 분이라고 한다”면서 “국내 최대 전력 수요처가 될 터인데, 수도권에는 발전 여력이 많지 않아서 결국 전북을 비롯해서 충남, 충북, 경북 이런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

다. 김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장서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고 유치한 역작”이라며 “경기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기반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용인시를 국회의원으로 둔 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국가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라며 “불필요하고 비경제적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반대론을 두고 “경기도의 이해만을 앞세운 수도권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김동연 지사 등을 직격해 집권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 공천헌금 수수·무마 의혹 ‘일파만파’

이수진 “의혹 보고에도 조치 없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 수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뼈를 깎는 쇠신을 약속한 가운데, 관련 의혹과 비위 행위 관련 탄원을 보고받았음에도 의혹을 덮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 다가온 과거 공천 관련 악재는 두 가지다. 첫째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던 시절, 강선우 당시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은 것을 보고 했고, 김 전 원내대표가 우려를 표했지만 김 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이다. 정치권은 공천 헌금 수수 자체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도 김 시의원

이 공천을 받은 데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의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번째 논란은 2024년 총선 서울 동작을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3년 말 당시 동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 검증 위원장을 맡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경쟁자인 이수진 전 의원을 컷오프하고 단수공천에 나설 것을 우려해 이 전 의원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탄원했다.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들에게 1000만~2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까지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탄원서를 받아 이재명 당 대표실의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지만, 의혹 자체가 유야무야 됐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보고 사실을 확인해주는 김 보좌관의 녹취까지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지도부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았음에도 모종의 이유로 들여다보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비이재명계의 공천 탈락이 이어진 지난 총선에 대한 공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의원의 폭로를 두고는 “탄원서에 대해서는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구의원 두 분은 총선 출마 후보자도 아니었고 그들은 내 경쟁자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연일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총 7명으로 구성

한동훈 당원계시판 논란 징계 속도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7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만간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계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윤리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한 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면, 위원장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원장 등을 호선으로 정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윤리위 구성 자체를 엄정히 구성해야 한다는 당대표 의지가 있었다”라고 했다.

윤리위원장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 오늘 최고위안에서도 (호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장 임명까지 의결하면 윤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다.

이날 윤리위원 선임으로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계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당 익명당원계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지속해서 올렸다는 취지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 바 있다. /서예진 기자